아태연구 제32권 제4호 (2025) https://doi.org/10.18107/japs.2020.27.4.004

세계경제 이행기 한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한일 협력 방안

이창수*, 김양희**

| 목 차 |

Ⅰ. 서론
Ⅱ. 실증분석의 체계
Ⅲ. 분석결과
Ⅳ. 결론

| 논문요약 |

본 연구에서는 '미-중 기술패권 분쟁'과 '국제무역 질서 이행기'의 특징을 갖는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GTAP 표준모형을 개량한 내생적 기술확산 GVC 모형을 사용하여 첫째 한-일 FTA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의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둘째 동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 또는 일본에서 외생적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상대국에 미치는 내생적 기술확산의 긍정적 파급 영향을 평가한다. 셋째 세계경제 이행기 또는 과도기 중 중국과 미국의 불공정 무역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아가 자유무역 규범 및 다자무역 체제 복원의 장치로 양국 간의 협력체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한일 FTA, 미-중 디커플링, 내생적 기술확산 모형, CGE 분석,

*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Email: chslee@khu.ac.kr.
**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부교수, Email: kyanghee@daegu.ac.kr

www.kci.go.kr

Ⅰ.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등 국가 간·지역 간 상호 연계성 심화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취약성(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특정 기술 및 산업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간섭 등 개도국의 공정경쟁 위반 행위의 한시적 허용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개방 이익이 불균형하게 배분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불완전성과 세계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1]이 위협받게 되었다(Wei, 2019; 이창수, 2023, 2024).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에 착수한 이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역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대 중국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용제품, 핵심 광물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즉 자유무역 기조를 지속하겠지만,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관련 핵심 기술 부문(즉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대 중국 디커플링을 추진하고자 했다. 중국은 이러한 시도를 보호주의라고 주장하며 기존 산업에서의 기술 돌파는 물론 미래 차세대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미국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국제 공조 체제 구축에서 벗어나 고관세 부과를 중핵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비난하던 미국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역사적 장기적 맥락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이창수 2023)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전략 속에서 자

1) Krugman(1979), Dollar(1986), Sergerstrom et al.(1990)에 의하면 기술 선진국과 기술 추격국의 기술진보율이 동일할 때 세계경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이창수, 2024, 3 재인용).

www.kci.go.kr

신의 공정경쟁 또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안정성 침해 행위를 감추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은 물론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을 탈취하고 있다는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며 관세정책을 통하여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입장 모두 전체의 한 측면만을 부각하는 정치적 전술일 뿐이다. 이 보다는 그 전술들 속에 관철되고 있는 두 패권 국가의 전략 즉 미래 경제 성장과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Wei(2019)와 이창수(2023)는 미-중 패권 분쟁의 본질을 기술패권 분쟁으로 파악하고 있다[2].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미-중 무역 분쟁 발발부터 새로운 다자체제 복원까지의 기간을 이행기 또는 과도기(Transition period)로 정의하고 있다[3]. 이창수(2024, 15)에 의하면 이행 기간에 "우리나라의 최선 장기 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기술 디커플링에 참가하는 것이다. 선진국 원천의 차세대 및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선 전략의 부차적 장점은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경쟁우위가 소멸하고 있는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 강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창수, 2024, 5). 김양희(2022; 2025b)는 미국이 패권 쇠퇴기에 접어들어 단독으로는 중국 봉쇄에 역부족을 절감해 한국, 일본, EU 등 동맹 및 우방과 함께 대중국 봉쇄 공동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중국의 반도체, 조선, AI, 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 굴기를 미국이 디커플링을 통해 견제할 때, 한국은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기본 가정은 차세대 및 첨단기술의 중국 확산은 차단하지만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관계는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 전략의 최대 위협요인이 미국 우선주의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미국 우선주의에 집착하여 동맹국으로의 기술확산에 소극적이라면, 기존 산업에서는 물론 미래 제조업에서도 대중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미래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도 어려워질 것이기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 동맹국에는 최대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2) <부록 1> 참조.
3) <부록 2> 참조.

www.kci.go.kr

위협요인은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은 중국 시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희토류 규제 등 중국의 경제 및 기술, 안보 분야에서의 보복 조치에 노출될 수도 있다(김양희, 2025b).

미국주도 대 중국 기술 디커플링 체제에 동참의 최대 위협요인인 미국의 보호주의와 우선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나아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통한 일본과의 장기적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럽 국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만, EU를 매개로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와 불공정 경쟁을 완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미국과 EU 이외의 국가, 특히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도성장 국가와 기타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도 미-중 양 패권 국가의 보호주의를 완화하면서 자유무역을 옹호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거대경제 블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처한 상황 또한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 중국 기술 디커플링 동맹체제에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 미-중 패권 분쟁이 초래하는 부정적 경제적 파급효과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중 기술패권 분쟁'과 이에 따른 '이행기'의 특징을 갖는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술패권 분쟁-이행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품 및 기술의 초국가적 효율성 추구를 가정하고 무역자유화의 효과에 집중하던 기존의 경제적 영향 평가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부분의 상품 및 표준적 기술에서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겠지만 미래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전략적 제품에서는 미국 주도의 대 중국 디커플링 또는 공급망 분리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무역자유화의 효과 분석에 최적화된 기존 모형에 디커플링과 동맹국 간 기술확산의 효과까지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포괄적 모형을 사용하여 한-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기존 모형은 Global Trade Analysis

www.kci.go.kr

Project(GTAP) 연산가능 일반균형 분석(Computable General Equilibrum: CGE) 모형을 말하며 포괄적 모형은 이를 개량한 내생적 기술확산 GVC 모형이다.

Ⅱ절에서는 내생적 기술확산 모형을 설명한다. 특히 기존의 표준모형에서 추가된 방정식 체계(내생 및 외생변수 포함)를 정리한다. 이후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Ⅲ-1에서는 내생적 기술확산 GVC 모형을 활용하여 한-일 양국 간 관세 삭감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 즉 양국 간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한다[4]. Ⅲ-2에서는 내생적 기술확산 GVC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또는 일본에서 외생적 기술혁신이 가설적으로 발생한다는 시나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한다. 특히 상대국 및 전 분석 권역에서 발생하는 내생적 기술확산의 정도와 GDP 증가 등 경제적 영향을 보고한다. 양국 간 무역 자유화의 이익 실현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Ⅲ-1의 분석을 넘어, Ⅲ-2에서는 기술 디커플링 환경 하에서 무역자유화보다 더 중요해진 양국 간 기술협력 또는 기술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설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Ⅲ-1의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와 Ⅲ-2의 내생적 기술확산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추정할 수도 있으나 분리하여 분석하게 된 것은 내생적 기술확산을 발생시키는 일본 또는 한국에서의 외생적 중간재 체화 기술진보에 대한 선행 연구(객관적이고 타당한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임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 이행기 또는 과도기에서도 패권 전쟁 종결 후 다시 이루어질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이 될 전 세계 자유무역의 규범 및 체제를 준비하고 정비하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까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또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환기 또는 과도기 중 중국의 국가 개입 불공정성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주의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며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결론(Ⅳ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

4) 이 결과는 개량 전 GTAP 표준모형을 활용한 동일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와 완전히 동일하다.

www.kci.go.kr

본 연구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내생적 기술확산 모형의 분석체계를 제시한다. Ⅲ절에서는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Ⅳ절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실증분석의 체계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GTAP 표준모형을 개량한 내생적 기술확산 GVC 모형(이창수, 2024)을 활용하여 한-일 FTA의 무역자유화의 시나리오와 일본 및 한국에서의 외생적 기술진보에 따른 전 세계에서의 내생적 기술확산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첫째, 한-일 FTA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태분석과 자본축적 분석 두 가지로 추정한다. 단기의 정태분석에서는 양국 간의 관세 식감에 따라 상대 가격이 변동하고 그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 등 생산요소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Hertel, 1997). 중장기의 자본축적 분석에서는 정태분석이 포착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가에 더해 거시경제 소득 변동에 따라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지만 기타 생산요소는 변동하지 않는다(Francois and McDonald, 1996).

둘째, 일본 또는 한국에서 중간재 확장 외생적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GVC 환경 속에서 상대국에 어느 정도의 내생적 기술확산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동 시나리오 분석에서 계산되는 거시경제 효과는 거시경제학에서의 충격반응 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와 유사하다. 이창수(2024, 4-5)에 의하면 기술확산국(s)에서의 외생적 기술진보(a_{kis})는 기술 원천국(r)에서의 내생적 기술진보(a_{kis}), r국 중간재 수출에서 s국이 차지하는 비중($E_{\kappa irs}$), r-s 국간 기술격차 및 s국의 기술흡수 능력(δ_{rs})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van Meij & van Tongeren, 1990; 이창수, 2009).

www.kci.go.kr

$$a_{kis} = E_{kirs}^{1-\delta_{rs}} \times a_{kir}, \qquad 0 \le \delta_{rs} \le 1, \quad 0 \le E_{kirs} \le 1 \qquad (식\ 1)$$

2.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버전 11의 GTA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모형을 분석한다. 이는 2023년 출시된 최근 데이터베이스로 160 국가·권역과 65 산업의 산업연관 및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7년도를 기준연도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160개 국가·권역을 9개 국가·권역으로, 65 산업을 12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 전환기의 미-중 기술 패권 분쟁과 미국 주도 동맹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한-일 FTA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한 국가에서의 외생적 기술진보의 상대국으로의 기술확산 유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연구 목적을 고려한 결과이다.

<표 1> GTAP 국가의 통합

국가 분류	내용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아세안7	아세안 7개국 CPTPP 4(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 3(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기타 선진국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대만
미국	미국
중국	중국(홍콩 포함)
인도	인도
EU27	EU 27개국
기타 세계	나머지 국가들(ROW)

▪ 자료: 저자 작성.

www.kci.go.kr

<표 2> GTAP 산업의 통합

대분류 산업	세부 산업	GTAP 산업 코드 (버전 11)
1차 산업	농수산업 (곡물과일 및 채소, 육류 및 낙농, 기타농업)	PDR, WHT, GRO, V_F, OSD, C_B, PFB, OCR, CTL, OAP, RMK, WOL, FRS, FSH, CMT, OMT, PCR
	광업	COA, OIL, GAS, OMT, NMM
제조업	가공식품	VOL, MIL, SGR, OFD, B_T
	섬유·의류	TEX, WAP
	화학	P_C, CHM, BPH
	철강 및 비철금속	I_S, NFM, FMP
	수송기기	MVH, OTN
	전자	ELE(컴퓨터, 전자·광학), EEQ(전자장비)
	기계	OME
	기타 제조업	LEA, LUM, PPP, RPP, OMF,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	CMN, OFI, INS, OBS
	기타 서비스	ELY, GDT, WTR, CNS, TRD, AFS, OTP, WTP, ATP, WHS, RSA, ROS, OSG, EDU, HHT, DWE

▪ 자료: 저자 작성.

3. 분석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첫째는 한-일 FTA의 무역자유화 시나리오(S1)이다. 내용은 한-일 양국이 쌀을 포함한 전 품목 수입에 부과하고 있던 기존 관세를 100% 감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 또는 한국 원천의 외생적 기술혁신이 중간재 교역을 통해 교역 상대국에 내생적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S2)이다. S2-1, S2-2는 각각 일본 원천 및 한국 원천 기술 충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이다. 미-중 기술패권 분쟁과 미국 주도 대중국 기술 디커플링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기술확산은 차단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S2-1은 일본에서 (k, i)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가 발생할 때, 즉 i산업 투입 k 중간재 확

www.kci.go.kr

장 기술진보가 일어날 때, 이 중간재의 GVC 네트워크 거래를 통해 s국(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한국, 미국, ASEAN 7, 기타 선진국, 인도, EU27)으로 기술이 내생적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이다. S2-2는 한국에서 (k, i)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가 발생할 때 s국(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ASEAN 7, 기타 선진국, 인도, EU27)으로의 내생적 기술확산의 발생을 분석하는 시나리오이다. 본 연구에서는 k 즉 기술진보 원천 제품으로 전자, 화학, 수송기기, 사업 서비스 등 4부문을 가정하였고 k가 투입되는 산업으로 전자, 화학, 수송기기, 사업서비스, 금속과 기계 등 6개 산업을 가정하였다.

<표 3> 시나리오의 체계

시나리오	내용		분석모형
S1.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한-일 양국의 상대 국가 수입관세 철폐 (쌀 포함 전 상품 부문 100% 관세 감축)		GTAP 표준모형 또는 내생적 기술확산 모형4)
S2. 내생적 기술확산 시나리오	r국에서의 외생충격	기타국가(s)에서의 내생적 기술확산	
S2-1. 일본에서의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	afall(k, i ,"일본") =10	afall (k, i, "s")	내생적 기술확산 모형
S2-2. 한국에서의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	afall(k, i, "한국") =10	afall (k, i, "s")	

▪ 주: 1) afall (k, i, r)은 r국 i산업 투입 k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를 의미함. r국은 외생적 기술 충격이 발생한 국가이고 s국은 r국 및 중국 이외의 국가·권역.
2) k: 기술진보 원천 제품. 전자, 화학, 수송기기, 사업 서비스..
3) i: k 중간재확장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산업. 전자, 화학, 수송기기, 사업 서비스, 금속, 기계.
4) GTAP 표준모형을 활용한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결과와 내생적 기술확산 모형을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완전히 동일하다.
▪ 자료: 저자 작성.

www.kci.go.kr

Ⅲ. 분석결과

1. 시나리오 1의 분석 결과: 한-일 FTA 무역자유화의 효과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로 거시 경제지표인 실질 GDP 증가율과 더불어 후생 증가(동등변화, Equivalent Variation: EV)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자본축적 분석에 따르면, 한-일 FTA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추가적으로 약 0.37% 성장하고, 후생수준은 29억 3천 7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는 실질 GDP가 추가적으로 약 0.14% 성장하고, 후생수준은 75억 5천 2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분석 및 자본축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각각 0.05%, 0.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분석보다 자본축적 분석에서 실질 GDP 증가율이 더 큰 것은 전자의 경우 자본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후자의 경우 모형 안에서 자본 증가가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태분석 결과는 1~2년의 단기적 효과로, 후자의 경우는 3~5년의 중장기 효과로 해석한다. 일본의 실질 GDP는 정태분석, 자본축적 분석의 결과 각각 0.02% 및 0.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 <표 4> 참조).

다음 동등변화로 파악한 후생변동[5]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및 일본의 후생은 각각 29억 3천 7백만 달러 및 75억 3천 5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 자본축적 분석).

---

5) 후생증가는 한-일 FTA가 없었을 경우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한-일 FTA 이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후생변화가 양(+)인 경우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에 소비하던 품목들을 정책 도입 이후 동일한 품목들을 소비하고도 소득이 남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 GDP가 생산과 국내가격(수입중간재 포함)을 통해 계산되는 데 비해, 후생변화는 소비와 국내 및 수입 최종재의 가격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www.kci.go.kr

<표 4> 한-일 FTA 무역자유화(시나리오 1)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경제 성장 (%)		자본증가 (%)		소비자 후생 (백만달러, 동등변화, 2017)	
	관세 감축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정태분석	100%	0.06	0.02	-	-	524	4,380
자본축적 분석	100%	0.37	0.14	0.69	0.23	2,937	7,535

▪ 자료: 저자 작성.

GDP 증가율 변동 및 후생변동으로 평가한 한-일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양국 모두 그간 나름의 자유화 정책 추진으로 관세장벽이 이미 낮은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6].

한-일 FTA 100% 관세 삭감에 따른 산업별 생산량 변동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본축적 분석 결과를 보면 기계(-1.16%)에서만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한다. 즉 전자(1.23%), 가공식품(1.12%), 섬유·의류(0.83%), 화학(0.45%), 사업 서비스(0.33%), 기타 서비스(0.28%), 농수산업(0.22%), 철강 및 비철 금속(0.09%) 및 광업(0.05%)에서 실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태분석에서는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자, 농수산업, 사업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에서 생산이 증가하지만, 기계(-1.61%), 광업, 기타 제조업, 수송기기(-0.15%) 및 화학(-0.05%) 부문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

6) GTAP V11 데이터베이스의 한국과 일본의 수입관세(실행세율, %)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의 일본 수입 실행세율	일본의 한국 수입 실행세율
1차산품	11.5	6.0
광산품	6.9	0.4
가공식품	14.6	8.2
섬유의류	9.1	5.7
화학	5.1	1.7
금속	1.7	0.3
수송기기	7.6	0.0
전자	5.7	0.0
기계	7.3	0.0
기타제조업	5.6	2.3
사업서비스	0.0	0.0
기타 서비스	0.0	0.0

www.kci.go.kr

2000년대 초반 한-일 FTA 협상 때 우리 측에서 우려했던 쟁점의 하나가 기술집약적 중간재 산업 및 핵심 부품산업에서의 피해 및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이었다(김양희 2004; 사공목 외 2013; 유관영·사공목 2004; 이시영·전성희 2004; 이시영 2013). 동 분석과 실증분석 체계가 같은 이창수 외(2015, 87)에 의하면 전자, 자동차, 금속, 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본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자본축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계산업에서만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을 뿐이고 기타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한-일 FTA 무역자유화(시나리오 1)의 생산효과

	정태분석 (%)		자본축적 분석 (%)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농수산업	0.12	-0.22	0.22	-0.12
광업	-0.77	-0.03	0.05	0.42
가공식품	0.90	-0.09	1.12	0.01
섬유·의류	0.36	-0.31	0.83	-0.06
화학	-0.05	0.36	0.46	0.60
철강 및 비철금속	-0.53	-0.55	0.09	-0.24
수송기기	-0.15	-0.91	0.31	-0.66
전자	0.31	0.32	1.23	0.69
기계	-1.61	0.45	-1.11	0.67
기타 제조업	-0.40	-0.12	0.14	0.11
사업 서비스	0.10	-0.05	0.33	0.05
기타 서비스	0.08	0.05	0.28	0.13

▪ 주: 저자가 직접 계산한 수치임.

▪ 자료: 저자 작성.

www.kci.go.kr

2. 시나리오 2의 분석 결과: 내생적 기술확산의 경제적 영향

<표 6>의 패널 A는 시나리오 2-1, 즉 일본에서 (k, i)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가 10%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의 내생적 기술진보 결과 [afall(k, i ,"한국")]를 보여주고 있다[7]. 한국의 (k, i) 부문에 상당한 수준의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패널 B는 한국에서 외생적 기술 충격이 10% 발생했을 때 일본으로의 기술확산 결과(시나리오 2-2)로 일본의 경우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이는 중간재 거래의 GVC 환경 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산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세계경제 이행기에 양국의 경쟁과 협력의 방향이 무역자유화보다는 기술협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 한국과 일본에서의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

<패널 A> 일본 기술 충격의 한국 확산 [시나리오 2-1, afall(k, i, "korea")]. 단위: %

		투입된 산업(i)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수송기기	전자	기계	사업서비스
투입제품(k)	화학	4.91	3.87	4.44	7.17	4.66	5.32
	수송기기	2.91	5.91	2.63	5.48	4.95	1.97
	전자	6.93	5.61	5.05	6.04	4.71	6.37
	사업서비스	2.13	2.64	2.94	2.32	2.26	2.25

7) 시나리오 2-1과 2-2에서는 일본 및 한국에서의 중간재 체화 외생적 기술진보 10%를 가정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는 없다. 즉 관련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시나리오 2-1(무역자유화)와 2-2(내생적 기술확산의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추정하지 않고 분리하여 분석하였음은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일종의 민감도 분석으로 일본 및 한국에서의 외생적 기술진보가 5% 발생하는 그리고 1% 발생하는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를 <부록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다.

www.kci.go.kr

<패널 B> 한국 기술 충격의 일본 확산 [시나리오 2-2, (afall(k, i, “japan”)]

		투입된 산업(i)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수송기기	전자	기계	사업서비스
투입제품(k)	화학	3.75	3.19	3.36	3.52	3.15	3.04
	수송기기	2.01	2.08	2.63	3.23	2.21	3.85
	전자	2.11	2.33	3.38	3.96	3.82	3.08
	사업서비스	1.89	1.61	1.80	2.14	2.00	1.88

주:1) k: 기술진보 원천 산업. 전자, 화학, 수송기기, 사업 서비스.
2) i: k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산업. 전자, 화학, 수송기기, 사업 서비스, 금속, 기계.
3) 정태분석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표 7>은 시나리오 2-1과 2-2에 따른 주요 국가·권역의 실질 GDP 변동을 보여준다[8].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시나리오 2-1과 2-2에서 각각 0.09% 및 0.04% 하락한다(정태분석 결과). 모형에서 대 중국 기술 디커플링과 미국 주도 기술동맹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으로의 기술확산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1의 결과 한국의 GDP가 1.56% 상승한다. 어느 동맹 국가·권역에서보다 한국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생적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2-2의 경우 외생 충격이 발생한 한국을 제외할 때 일본의 실질 GDP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 일본 다음이 아세안 7국(IPEF 참여국)이다. 특히 두 국가가 기술집약 산업 국제 공급망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7>의 마지막 열은 미국에서 10%의 (k, i)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가 발생할 때 다른 국가·권역에서의 실질 GDP 변동이다. 미국의 기타 동맹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대만)에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한국, EU27국, 일본, 아세안 7국의 순서이었다. 미국 주도 기술동맹 권역으로 국제 공급망을 재편하는 세계경제 이행기에 이들 국가 간의 협력관계 또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8) 주 7) 참조.

www.kci.go.kr

<표 7> 한국과 일본에서의 중간재 확장 기술(10%)에 따른 각 권역에서의 GDP 증가율

단위: %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아세안 7국	인도	기타 동맹국	EU 27
일본에서의 기술진보 (시나리오 2-1)	-0.09	1.56	2.10	0.53	0.33	0.02	0.97	0.41
한국에서의 기술진보 (시나리오 2-2)	-0.04	3.56	0.62	0.14	0.57	0.03	0.41	0.19
미국에서의 기술진보	-0.12	1.19	0.71	1.55	0.70	0.03	1.53	0.86

자료: 저자 작성.

주:1) 외생적 기술진보 5%와 1%를 가정한 경우의 각 국가·권역에서의 GDP 증가율은 <부록 그림 1>을 참조할 것.

<표 7> 각 국가·권역의 GDP 변동률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결과는 일본, 한국 또는 미국에서 중간재 확장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각각 10%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로 왜 10%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단지 "한 국가 $(k-i)$ 중간재에서의 외생 충격 → 원천국에서 무역 상대국으로의 $(k-i)$ 중간재 거래 → 이를 매개로 한 무역 상대국으로의 내생적 기술확산 → 상대국에서의 GDP 증가"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파급효과에 노출된다는 것을 시사할 뿐이다. 즉 보고된 수치 자체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한-일 FTA의 무역자유화의 효과(<표 4>)에서 보고한 GDP 변동률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 단 어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인가에 대한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www.kci.go.kr

Ⅳ. 결론

한-일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양국 모두 나름의 자유화 정책 추진으로 관세장벽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9] 양국 모두 쌀 등 농산물 민감 부문을 공유하고 있어 민감부문 개방에 따른 충격 또한 어렵지 않게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 제약 및 보건·의료 부문이 민감부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철강 등 기간산업 등 기존의 전통 제조업에서도 양국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간 대화 및 협력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 간의 제로 썸(zero sum) 게임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세계경제 이행기 '공정한 경쟁과 기술협력'이라는 뉴 노멀의 시각에서 양국 간 소통 및 분쟁 해결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일본 또는 한국에서의 외생적 기술진보가 발생할 때 기술을 체화한 중간재의 국제적 거래를 통해 상대국 나아가 전 세계 주요국가·권역에서 어느 정도의 내생적 기술확산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이 결과 일본과 한국에서의 기술진보가 각각 상대국에서의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공존하면서 기술 및 공급망 디커플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세계경제 이행기 환경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효과보다 동맹국간 내생적 기술확산의 효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간재 거래를 매개로 한 양국 간의 기술 및 제품 생산 연관성을 보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의 공급망 애로 요인 해소, 미국 및 중국 진출 기업의 공동 대응 및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양국 간 무역 자유화보다 더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 및 차세대 기술의 혁신 과정에서의 그리고 혁신 기술의 제품화 과정에서의 협

9) 김양희(2004)는 비관세장벽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있으며 이는 한일 FTA 체결의 저해요인인 동시에 해소를 위한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무역 자유화의 시나리오에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한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www.kci.go.kr

력 및 공동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양국이 향후 추진할 대 미국 투자에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및 로봇 등 유사 분야에서의 경제 안보 협력도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미-중 기술패권 분쟁 및 대 중국 기술 디커플링 동맹의 특성을 갖는[10] 세계경제 이행기 또는 과도기 중 한국의 최선 전략은 중국보다는 미국 주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다. 차세대 첨단 기술 국제 네트워크 발전에 참여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 주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중국 원천 기술진보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중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급격히 약화할 것이다. 또한 특정 기술, 특정 산업을 목표로 한 중국 정부의 개입이 불공정 경쟁으로 자유무역 규범을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중국 사기업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 한국의 기존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소멸 또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11]. 따라서 전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어떤 기술 어떤 산업에서 상생하고 어떤 기술 어떤 산업에서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 양국 정부가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면서 그 속에서 양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서로 교차하면서 투입-산출 연결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선 전략을 위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장기적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 보호주의 요인 또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서 미국이 자국 고용 및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무역 정책 또한 자유무역 규범을 위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 세계경제 이행기 또는 과도기 중 중국의 불공정성과 미국의 보호주의로 세계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때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이 리스크에 저항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EU라는 거대 공동체이다. 일본과 한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

10) 첨단 및 차세대 기술의 측면에서 디커플링이지만 범용 기술 또는 일반 무역의 측면에서는 디리스킹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 특히 국내 중소 규모의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잃으면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www.kci.go.kr

반자협정(CPTPP)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은 CPTPP를 미-중 양국 발 재량적 무역정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활용하면서 공정경쟁 다자무역체제의 새로운 규범 확립의 추진체로 발전시켜야 한다(이창수 2023; 69-71; Kimura, 2021)

새로운 다자무역 체제 규범은 기존의 WTO 규범을 근간으로 하되, 그간 선진국, 개도국, 최빈 개도국 구도하에 관대하게 허용해 왔던 개도국의 공정경쟁 위반 행위 허용의 범위 및 특혜에 대한 재구조화와 개도국 간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강화된 공쟁경쟁 사항을 CPTPP 가입 조건으로 적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염된 '자유무역'의 개념을 수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 자유무역 체제 회원국의 확대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CPTPP를 통하여 IPEF에서 추진되었던 공급망 협력과 함께 핵심 광물 공동 개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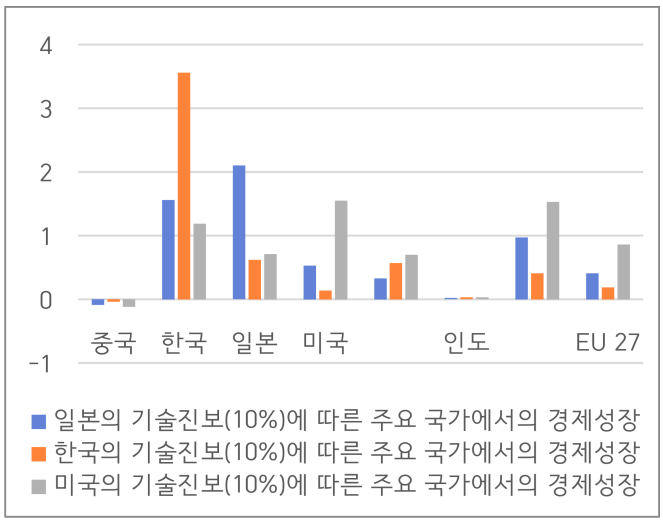
한국이 CPTPP 참가할 경우 중요한 출발점이 다름 아닌 한일 FTA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양자 협상의 시장접근 분야이다. CPTPP 가입 조건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협력과 공동 대응, 보다 근본적으로는 첨단기술 접근의 이익과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손실 상황에서 동태적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에서의 양 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대일 수산물 수입 규제 등의 쟁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CPTPP 참여를 공식화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 FTA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지속성장의 잠재력 제고라는 장기적 틀 속에서 한-일 FTA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양국 기업 간 또는 연구기관 간 차세대·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양국의 벤처와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 제품화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양국의 젊은이들 간의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교류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기술집약적 중간재 산업 및 핵심 부품산업 그리고 일부 소비재 및 중소기업의 피해 및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2000년대 초반 한-일 FTA 반대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 논점은 더 이상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 대일 기술격차가 과거에 비해 좁혀진 오늘날, 여전히 기계 등의 분야에서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양국이 수평적 기술협력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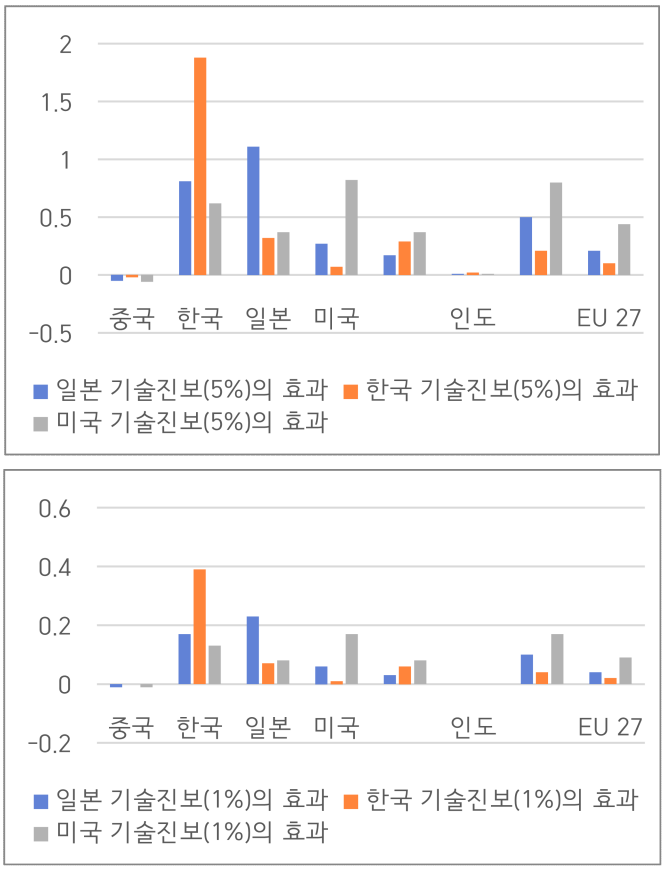
www.kci.go.kr

다(김양희, 2025a). 그러나 이와 함께 2000년대 초반 한-일 FTA 반대의 중요한 논점이었던 양국간 정서적 갈등의 정치경제학은 아직도 강력하다. 양국 간의 미해결 정치쟁점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국내 정치경제 난제에 이를 정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정치적 유인이 아직 강력하기 때문이다. 반일 정서가 강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이재명 정부(2025년 5월 출범)의 경우, 우려와 달리 일본의 이시바 정부와 한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에의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0월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의원이 자민당 총재 및 신임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주의 파고가 악화일로인 오늘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현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부록 그림 1> 민감도 분석:
한국과 일본에서의 외생적 기술 진보에 따른 각 권역에서의 GDP 증가율



www.kci.go.kr



<부록 1> 미·중 기술패권 분쟁[12]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자 중국의 시장개혁파와 국가주의 학파는 무역 분쟁의 원인과 본질, 중국의 대응 방안(다자무역체제 하 개방적 기술혁신 ↔ 독자적 기술혁신), 대 미국 디커플링 정책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부록 표 1 참조).

12) 이창수(2023, 66-68)의 내용임.

www.kci.go.kr

<부록 표 1> 중국의 시장개혁파와 국가주의 학파의 입장

논점	결론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산업구조 선진화(upgrading)가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도전이기 때문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시장개혁파)	무역 분쟁의 본질이 기술전쟁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다자무역체제 하 개방적 기술혁신을 주장	시장의 힘 VS. 국가권력
	(국가주의학파)	전략 산업과 주요 기술에서의 국가 투자로 독자적 기술혁신 체계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	
경제적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시장개혁파)	미국경제로부터 분리하는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디커플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상호 의존 대. 자립
	(국가주의 학파)	대 미국 경제 디커플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자료: 1) 이창수(2023, 67)의 <표 1>.

양 학파는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는 무역분쟁의 본질이 기술전쟁임에 의견이 일치했으나 두 번째 및 세 번째 논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시장개혁파는 다자체제 개방적 기술혁신과 대 미국 경제 디커플링 반대를 주장한 반면, 국가주의 학파는 독자적 기술혁신 체계와 대 미국 디커플링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중국 집권 세력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학파의 입장이지만 이는 단지 대외용 전략적 행동일 뿐이다. 중국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 및 동맹국의 중국 배제-기술 디커플링 체제 완성 이전에 적극적 국가 개입을 통하여 핵심 및 차세대 기술 능력을 자유무역 환경에서 최대한 제고하는 것이다.

www.kci.go.kr

<부록 2> 이행기와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시나리오[13]

이창수(2023)는 1990년대 이후 '무역의 공정성' 쟁점[14]으로 흔들리던 자유무역 다자체제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보호무역' 조처로 대응함으로써 무력화되었다고 그리고 그 이면에 양국 간의 기술패권 분쟁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후 범용제품에서의 자유무역과 첨단 및 차세대 기술 부문에서의 디리스킹이 추진되는 하이브리드 무역체제가 과거 다자 자유무역 체제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전환기 무역체제는 기술패권 분쟁이 끝나고 새로운 다자무역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이 이행기 또는 전환기의 종결 또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시나리오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이창수 2023, 69).

시나리오 1: 제조업 선진국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과 중국의 제조업 선진국 진입 실패(선진국 최선, 중국 최악).

시나리오 2: 제조업 선진국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과 중국의 제조업 선진국 진입(선진국 차선, 중국 차선).

시나리오 2-2: 제조업 선진국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과 중국 또한 차세대 전략산업에서 경쟁력 확보, 중국의 제조업 선진국 진입은 지연(선진국 제2차선, 중국 차선).

시나리오 3: 제조업 선진국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과 중국의 제조업 선진국 진입 및 차세대 전략산업에서의 성공(선진국 차악, 중국 최선).

시나리오 4: 제조업 선진국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패와 중국의 제조업 선진국 진입(선진국 최악, 중국 차선).

---

13) 이창수(2023, 69)의 각주 6의 내용임.
14) 중국의 특정 산업에서의 국가 보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www.kci.go.kr

		중국		
		차세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제조 선진국 진입	
			성공	실패
제조 선진국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고도화	성공	S2-2	S2	S1
		S3		
	실패		S4	

중국, 미국 등 플레이어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결국 시나리오 2, 2-2 또는 시나리오 3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이행기간 동안 맞대응 보복 전략(tit-for-tat)으로 인해 벌어지는 혼란과 단기적 경제적 충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진국과 협력하여 시나리오 2로 가는 전략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이 제조업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다는 것은 중국과 경쟁하는 부문에서 우리의 경쟁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김영한(2013), 「한·일 FTA가 국제분업 및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분석」, 권영민 (편), 『한·일 FTA 보완대책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04-28, 한국경제연구원.

김양희(2004),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전망: 한국의 시각」,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pp. 139-165.

김양희(2022),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TVC)'」,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양희(2025a), '<김양희 칼럼> 한일협력, FTA와 CPTPP 동시병행 추진 제안', 『피렌체의 식탁』 , 2025년 6월 30일. 메디치.

김양희(2025b), 「보호주의 진영화와 트럼프 시대 2.0의 도래」, 『동향과 전망』 125호 가을-겨울호, pp. 197-207, 한국사회과학연구회·박영률출판사.

사공목·신현수·이우광·박승록(2013), 『한·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연구보고서 2013-663, 산업연구원.

유관영·사공목 (2004), 『한·일 FTA의 영향분석과 산업구조조정: 일반기계 및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이기환(2013), 「한일 FTA 협상 중단의 원인과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20집 3호, pp. 293-311.

이시영·전성희(2004), 「한·일 FTA: 정치경제적 접근」, 『국제통상연구』, 제9권 제1호, pp. 143-167.

이시영(2013), 「한·일 FTA에 따른 산업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 권영민 (편), 『한·일 FTA 보완대책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04-28, 한국경제연구원.

이창수(2009), 「기술진보를 내생화한 CGE 동학 모형 작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출간 보고서.

이창수 (2023), 「미 -중 디커플링 정책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통상연구』, 제28권 제2호, pp. 59-77.

이창수 (2024), 「미-중 기술 디커플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49권 제6호. pp. 1-23.

이창수·윤미경·송백훈 (2015),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20권 제3호, pp. 85-108.

Francois, J. and B. McDonald(1996), "Liberaliz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GTAP Model", GTAP Technical Paper, No. 7, https://www.gtap.agecon.purdue.edu/resources/tech_papers.asp.

Hertel, T.(1997)(ed.),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www.kci.go.kr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ura, F. (2021), "The Impact of COVID-19 and the US-China Confrontation on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34, No. 1, 28-41.
Meijl, H. van and F. van Tongeren(1999), "Endogenous International Technology Spillovers and Biased Technical Change in the GTAP Model," GTAP Technical Paper, No. 15.
Wei, L. (2019), "Towards Economic Decoupling? Mapping Chinese Discourse on the China-US Trade War",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12 No.4, pp.519-556.
金良姬(2012), '地域統合型日韓CRIAにむけて', 『日韓新時代と経濟協力』, 慶応義塾大學出版會.

<재인용>
Dollar, D.(1986), "Technological Innovations, Capital Mobility, and the Product Cycle in North-South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6, No.1, pp.177-90.
Krugman, P.(1979), "A Model of Innov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the World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7, No.2, pp.253-266.

|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20일 |
|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1월 14일 |

www.kci.go.kr

| ABSTRACT |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Japan FTA in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hang-Soo Lee
(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Yang-Hee Kim
(Dept. of Economics, Finance and Trade, Daegu University)

The global economy is now characterized by the 'US-China technology hegemony dispute' in the 'transition period towards a new steady-sate equilibrium'. This implies that economic impacts through technology diffusion and supply chain are more crucial than the traditional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when we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japan FTA. Considering this, we construct an endogenous technology-diffusion GVC model after modifying the GTAP standard model to analyze the technology diffusion scenario as well as the trade liberalization scenario of the Korea-Japan FTA. First, the trade liberalization scenario of the Korea-Japan FTA is estimated. Second, The positive long-run effect of technology diffusion on the other country are found when exogenous technological change in Korea or Japan is hypothetically assumed. Thir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global economy, we intend to think the cooperative strateg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means to mitigate the risks posed by unfair trade practices of China or the United States.

▪ Key words: Korea-Japan FTA, CGE, technology Decoupling, endogenous technology diffusion, transition period.

www.kci.go.kr